https://doi.org/10.31929/namdo.2020.41.51

#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유교 윤리 소환과 경제 갱생 프로젝트*

## - 익산문묘(益山文廟)를 중심으로 -

설주희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교수

- 목 차 -

Ⅰ. 머리말
Ⅱ. 경제대공황과 유교 윤리 의식의 '변형적' 소환
Ⅲ. 익산문묘의 경제 갱생 활동
Ⅳ. 결론

**〈국문초록〉**

1920년대부터 연달아 발생한 공황으로 1930년 일본 경제는 만성적 위축 상황에 직면하였다. 조선총독부는 경제를 활성 시킬 방안으로 농가가 자체적으로 경제 갱생을 도모하는 '농가경제갱생계획' 즉, 농촌진흥운동을 수립·시행하였다. 농촌진흥운동은 농가 경제를 갱생시켜 국가적 궁핍을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었지만 영농 관련 기술의 보급이 아닌 농민의 '정신'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조선총독부가 농가에 보급하고자 한 정신은 '숭고한 희생적 봉공심(奉公心)'과 '자기를 바치는 노력'이었다.

1932년 조선총독부는 이 '숭고한 정신'을 유도하기 위해 조선 사회에서 통용되던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45347)

www.kci.go.kr

향약 덕목인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에 주목하였다. 향약의 특성상 경제적 자립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민심을 지배 정책에 알맞게 '교화(敎化)'하고 민풍을 '개선'할 수 있는 덕목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933년 학무국장은 모든 향약 단체에 기본 덕목인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 외에 '생활개선(生活改善)'과 '산업장려(産業奬勵)'라는 두 개의 조목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조선총독부가 추가적으로 지시한 '생활개선(生活改善)'과 '산업장려(産業奬勵)'는 자력(自力)에 의한 생산성 고양으로 경제 갱생을 도모하는 농촌진흥운동의 목적과 맞닿아 있다. 조선총독부는 촌락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의 생활을 향약 규약으로 통제하여, 개인에게 적극적인 경제 활동의 수행을 종용하고 이로써 '봉공(奉公)'을 유도하였다. 결국 일제강점기 향약은 지역공동체 구성원에게 식민지배 정책에 적합한 생활방식을 강권하기 위해 마련된 '선택된 전통'이자, 변형되어 '소환된 전통'이었다.

조선총독부의 장려에 따라 1935년 1월 익산문묘(益山文廟)에 향약이 신설되었다. 외피는 지역공동체의 형식을 띠었지만 식민 행정 권력에 의해 배태된 익산문묘 향약은 활동 측면에서 관변적 성격을 보였다. 조선총독부는 향약이 지닌 재산 또는 향약 구성원이 지닌 재산을 식민통치에 흡수하려는 '물질적 동원'과 향약 구성원의 신체를 식민지배 체제에 적용시키는 '인적 동원' 두 가지를 목적으로 설정하고 향약을 동원하였다.

주제어 : 익산(益山), 향약(鄕約), 향교(鄕校), 조선총독부, 일제강점기

## Ⅰ. 서론

전통적인 유교 사회는 사(私)보다 공(公)을 우선한다. 때문에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고, 공동체 구성원인 개인의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의 수행을 중시한다. 하지만 유교 윤리가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담지하지는 않는다. 유교적 관점에서 공(公)은 집단 논리에 매몰되지 않은, 일종의 '공유' 개념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1)]

반면 근대 일본에서의 공(公) 개념은 이와 달랐다. 일본은 공(公)에 '국가'를 투영하면서 '국가적 의미'를 담는 상징체계로 전환시켜 이른바

1) 한형조 외, 『500년 공동체를 움직인 유교의 힘』, 글항아리, 2013, 18~23쪽.



www.kci.go.kr

‘멸사봉공(滅私奉公)’과 같은 조어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2] 결국 일본에서 공(公)은 개인보다 국가를 상위에 두어 전체, 즉 국가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유도하는 개념이 되었다.

일본형 공(公) 개념은 대공황 이후 경제 위기에 봉착한 조선총독부의 지배 정책에 차용되었다. ‘국민을 위한 국가’가 아닌 ‘국가를 위한 국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조선총독부는 공(公)의 강조로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의 각성을 강제하면서 개인에게 ‘국가를 위한 거룩한 희생’을 강조하였다. 공(公)을 위한 개인의 희생은 사회적 선(善)으로 자리 잡아 다종다양한 공동체를 매개로 식민지 조선에 주입되었다.

19세기 후반부터 나타난 제국주의의 특징 중 하나는 지역공동체 및 각종 사회단체를 동원하여 제국주의의 효용 가치와 식민 이데올로기를 선전한 것이다.[3] 조선총독부 역시 식민 정책을 촌락 말단까지 효율적으로 전파시키기 위해 지역공동체와 각종 사회단체를 활용하였다. 이에 본고는 경제대공황 이후 식민지 조선의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장려된 일본형 유교 윤리, 다시 말해 국가주의적인 ‘공(公)’이 지역공동체 및 사회단체를 통해 전파되던 식민지 조선의 사회상을 조망하고자 한다.

조선총독부가 동원하고자 한 각종 지역공동체와 사회단체 가운데 향교는 여타 단체보다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식민 행정의 통제권 내에 위치함과 동시에 지역 여론 조성의 역할 역시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와 지역공동체의 교집합으로 위치하였던 향교는 식민 정책을 촌락에 전파시킬 수 있는 좋은 매개체였다. 본고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주의적 공(公)이 향교를 통해 지역민에게 주입되는 방식에 착안하여 일제강점기 익산향교(益山鄕校)의 활동에 주목한다.

일제강점기 익산은 도시개발 계획에 따라 빠른 시간 내에 농업지대에서 식민도시로 전환되었다. 특히 이리는 개항장 군산을 배후로 두어

2) 김태창 편저, 조성환 역, 『공공철학』, 동방의빛, 2010, 51~58쪽.
3) 박지향, 『제국주의:신화와 현실』,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173~185쪽.

www.kci.go.kr

일본의 경제도시 오사카와 수직적인 도시구조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리는 '종속적 식민도시', '철도 도시', '농업 도시', '위생 도시', '이민자 도시'라는 특성을 갖게 되었고, 단기간에 경제도시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도시의 자본 생산 능력이 증가할수록 조선인 슬럼 역시 확대되어 지역 사회 내 제국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고, 급진적인 도시개발로 인해 전통과 근대가 대립하였다.[4)]

전통도시 유력자와 근대도시 자본가의 대립, '내선잡거(內鮮雜居)'에서 발생하는 민족 간 불화,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 사회주의의 유행 등 도시 발전 속도에 따라 익산 내에서 전통과 근대는 끊임없이 길항하였다. 더구나 1929년부터는 경제대공황의 여파가 조선 농촌을 잠식하기 시작하였고, 익산은 이전보다 더 많은 생산 능력의 고양으로 경제 도시의 책무를 다해야 했다. 이때 식민 행정의 종속 단체이자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이었던 익산향교에 향약(鄕約)이 신설되었다.

본래 조선 사회에서 향약은 유교적 예속(禮俗)의 전파와 실행을 담당하는 향촌의 자치 규약이었다. 향촌 지배계급은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공고화와 농민층 이탈을 방지하여 자신들의 지배 체제를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 향약을 설립·시행하였고, 이로써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이라는 4개의 향약 덕목이 탄생하였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향약에는 전통시대와 다른 목적이 부여되었다. 1930년 『동아일보』는 향약의 4가지 덕목에 내재된 '도덕적, 법률적, 사교적, 공제적(共濟的) 기능'이 국가의 고갈된 경제적 자원과 황폐화 된 민심의 대안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며, '유교의 근본정신인 도(道)와 예(禮)의 세례를 받은 단체'인 향약이 '조선 경제·사회에 획기적인 원동력'이라고 보도하였다.[5)] 향약에 식민지 조선의 황폐화 된 경제와 민심을 부흥시킬 '사명'이 부여된 것이다. 이에 본고는 익산문묘(益山文

4) 정승진, 「위계적 복합공간으로서의 식민도시, 이리」, 『아세아연구』 150,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2.

5) 『동아일보』, 1930년 1월 7일, 「朝鮮의契와農村」 ; 『동아일보』, 1930년 1월 30일, 「朝鮮의契와農村」.

www.kci.go.kr

廟) 향약의 경제 갱생 활동에 접근하여 조선총독부로 위시되는 식민 행정 권력이 지역민의 희생을 강권하는 양상에 천착하고자 한다.

주요 자료로는 익산향교에서 생산한 문서군을 활용할 계획이다. 개인 소장자에 의해 보관되어 온 이 문서군은 소장자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상태였다. 때문에 일부 연구자[6]만 접근 가능하여 본 문서가 지닌 역사적 가치가 활발히 조명되지 않았다. 익산향교 생산문서는 19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60여 년에 걸쳐 작성되었다. 총 400여 건의 공문서와 36권의 전적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방 직전과 한국전쟁 중에도 작성되었다. 익산향교에서 상부 기관에 보고한 문서는 물론, 향교 내부 문서와 지역 내 활동 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7]

일제강점기 향교 생산 문서의 대부분이 향교 내부의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소실되었기에 현전하는 향교 생산 문서는 소수이다. 더불어 익산향교 생산문서와 같이 연속성을 지닌 문서'군'은 특히 더 드물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향교의 지속적인 활동을 조망할 수 있는 익산향교 생산문서를 통해 경제대공황 이후 향교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경제대공황 이후 식민지 조선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경제 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조선총독부의 대책을 확인할 것이다. 이 대책에 내재된 일본형 '공(公)' 개념의 확산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일반민이 경제 갱생 프로젝트에 동원되어 가는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조선총독부는 일반민의 동원을 위해 지역 내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창안을 강조하였고, 이 공동체 창안 과정에서 전통이 소환되었다. 3장에서는 여기에 주목하여 익산향교, 그 중에서도 전통을 새로운 형태로 적용한 익산문묘 향약의 설립과 향약 활동을 중심으로 조선총독부의 지

6) 익산향교 생산문서에 관한 연구는 다음의 논고가 유일하다. 권익산, 「일제강점기의 익산향교(益山鄕校) 연구(硏究)」, 『청람사학회』 13, 청람사학, 2006.

7) 필자는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근현대유학연구단의 현장조사를 통해 본 문서군을 수집·정리하게 되었다. 현재 익산향교 생산문서는 소장자의 요청으로 공간(公刊)이 불가한 문서군이다. 본고 역시 소장자의 활용 동의를 얻어 작성하였다. 근현대 지역사 발전을 위해 연구활용을 허락해주신 소장자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밝혀 둔다.

www.kci.go.kr

역공동체 운영 목적을 톺아보고자 한다.

## Ⅱ. 경제대공황과 유교 윤리 의식의 '변형적' 소환

1920년 제1차 세계대전 전후공황, 1927년 금융공황, 1929년 세계대공황이 연속되면서 일본은 만성불황에 시달렸다. 1929년 일본 정부의 재정 긴축 발표 이후에도 계속된 물가 하락에 식민지 조선 경제는 더욱 위축되었다. 게다가 1930년 일본, 조선, 대만의 벼농사는 유례없던 대풍작을 이루었다. 1930년 조선의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540만 석 이상 증가하였고, 일본은 783만 석 이상 증가하여 미곡가는 급락하였다. 1920년대 일본 미곡시장의 쌀 1섬 당 가격은 평균 43엔이었으나 1930년에는 17엔으로 폭락하였고, 조선의 경우에는 폭락세가 더욱 심각하여 인천에서 쌀 1섬이 12엔에 거래되었다.[8] 미가 하락은 인구의 약 80%가 농사에 매진하여 있던 조선에 큰 경제적 타격을 주었고 농촌의 궁핍은 날로 심각해져 갔다.[9]

도민(道民)의 75%가량이 농민이었던 전라북도의 경제 상황은 더욱 침체 상태였다. 경제 불황이 전북 농촌에 미친 영향은 1932년 전라북도 경찰부(警察部)가 실시한 〈전라북도 세민(細民) 생활상태 조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932년 전라북도에 거주한 115,670호(戶) 가운데 부채가 있는 가계는 83,947호로 전체 호수의 약 72%를 차지하였다. 이들의 부채액은 총 2,906,968엔으로 부채 가구 1호 당 평균 34.62엔의 부채를 지니고 있었다.[10] 부채 증가는 농가 파산으로 이어져 빈민이 증가하는 현상을 불러왔고 빈민은 생계를 위해 거주지를 떠나 일자리와 식재료를 찾아 유랑하였다.[11]

---

8) 최병택, 「1920년대 말~1930년대 전반기 조선총독부의 미곡창고 설립과 그 운영의 변화」, 『역사교육』 130, 2014, 208쪽.

9) 『동아일보』, 1929년 1월 1일, 「全朝鮮 模範農村調査 其一」.

10) 全羅北道警察部, 『細民の生活狀態調査』 第二報, 1932, 325쪽.

11) 全羅北道警察部, 위의 책, 335쪽.

www.kci.go.kr

> 대다수의 빈민은 목숨을 이어가기 위해 간장 5홉, 벼 2되 같은 소규모 절도를 저지르거나, 친족의 물품을 훔쳐 굶주림을 피하는 도둑질을 일삼고 있다. 1932년 1월부터 3월 사이 붙잡힌 강도 초범자 31명 중 55%가 생활 곤란으로 강도짓을 벌였고, 절도 초범자 399명 중 83% 역시 생활 곤란으로 도둑질을 하였다.

수년간 지속된 경제 위기와 급증하는 실업률은 사회를 불안정하게 하였고 일본 정부의 지배 정책에 대한 비판 역시 초래하였다. 일본 정부는 실업 대책의 기초 자료로 삼기 위해 일본 내 실업자 현황을 조사하였다.[12] 이듬해인 1930년 조선총독부에서도 대대적인 국세조사(國勢調査)를 실시하였다. 조선총독은 도지사에게 담당 지역 실업률을 조사·보고하도록 통첩을 내렸는데, 이 역시 조선총독부가 실업 대책 기초 자료로 삼기 위함이었다.[13]

> 요즘 일반 재계 불황으로 실업자가 증가한다고 하지만 조선에서는 실업자에 관한 조사 자료가 없어 이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는 상태였다. 정확하고 완전한 실업조사를 시행하지 않으면 파악할 방법이 없다. 조사는 긴 시간과 많은 경비가 들어가지만 지금 정세(情勢)상 실업 추세를 조사하여 당면한 실업 방지 문제를 해결하고 구제 시설의 참고 자료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1929년 12월 5일 도지사에게 조사 보고를 하도록 통첩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총독관방 문서과에 조사계를 두고 국세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대상은 실업 상황과 더불어 공장과 광산, 어업, 창고업, 소작 관행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었다.[14] 이 가운데 가장 중점을 두

---

12) 이 조사에 의하면 일본 내 노동 가능 인구 659,982명 중 268,590명이 실업 상태에 있었다. 이는 40%가량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동아일보』, 1929년 11월 13일, 「失業者救濟 政府調査完了」.

13) 內務局 社會課, 「府及指定面의 失業狀況」, 『朝鮮』 5, 朝鮮總督府, 1930, 86쪽.

14) 『동아일보』, 1930년 12월 24일, 「工場, 鑛山의 勞働實地調査」; 『동아일보』, 1930년 12월 28일, 「猪島굴漁場을 總督府에서 調査」; 『동아일보』, 1930년 2월 8일, 「一般營業倉庫의 狀況을 調査하

www.kci.go.kr

어 시행된 조사는 일반인의 생활상태 조사였다. 경제 상황 악화에 따라 빈곤선에 가까워진 이들의 생활 상태를 상세히 보고하여 궁핍으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소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이었다.[15]

생활상태 조사 담당자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는 '물가의 폭락 특히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현재 농촌의 궁상(窮狀)은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며 일본 국내의 불경기로 재일조선인의 귀향 비율이 격증하고 있어 당분간 조선의 실업률은 상승할 것이며, 이에 따라 불경기 또한 심해질 전망이므로 민심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16] 이후 『동아일보』가 농촌 빈민의 생활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하였지만 결과는 동일하였다. 조선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 인구의 경제생활은 나아질 가능성이 희박하였다.[17]

많은 시간과 경비가 투입된 농촌의 생활 상태 조사 결과, 회복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제 상황으로 민심은 더욱 악화될 예정이었다. 민심의 악화는 식민지배 체제의 균열을 초래하기 때문에 조선총독부는 민심을 안정시킬 대책을 마련하여야만 했고, 결국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하였다.[18]

> 어떻게 이 같은 궁상을 구제하고 타개할 것인가?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토목사방사업 시행**(강조-인용자)으로 임금을 배부하여 구제(救濟)하는 사업이다. **두 번째는 자주·자력으로 농가 경제를 재건시키는 방책**이다. 첫 번째는 응급조치로 가장 먼저 실시하였지만 효과는 한시적이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농촌을 구제하고 농가 경제를 재건하는 자력갱생운동, 다시 말해 농가가 자체적으로 갱생하도록

---

라고」; 『동아일보』, 1930년 3월 15일, 「面單位의 小作慣行調査」.

15) 善生永助, 「朝鮮生活狀態照査」, 『朝鮮』 4, 朝鮮總督府, 1930, 85쪽; 朝鮮總督府, 『施政三十年史』 前篇, 朝鮮總督府, 1940, 403쪽.

16) 善生永助, 「最近の世相」, 『朝鮮社會事業』 4, 朝鮮社會事業協會, 1931, 19~23쪽.

17) 『동아일보』, 1931년 1월 1일, 「米價暴落 農村의 實情은 如何 細農生活의 細密調査 一」; 『동아일보』, 1931년 1월 2일, 「米價暴落과 農村實情 細農生活의 數字的調査 二」; 『동아일보』, 1930년 10월 10일, 「農村救急이 더 緊要」.

18) 朝鮮總督府, 『施政二十五年史』, 朝鮮總督府, 1935, 717쪽.



www.kci.go.kr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지금 시점에 가장 적합하고 정확한 방책이다.

조선총독부는 경제를 활성화 시킬 첫 번째 방안으로 국가 단위의 토목 공사를 시행해 임금을 배부함으로써 경제 진작 효과를 거두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는 임시적 효과에 불과했다. 때문에 두 번째 방안인 농가가 자체적으로 경제 갱생을 도모하는 '농가경제갱생계획' 즉, 농촌 진흥운동을 수립·시행하게 되었다.

1933년 3월 7일 정무총감은 '농가경제갱생계획에 관한 건'을 통첩하여 농가경제갱생계획의 구체적인 방안과 취지를 하달하였다. 조선총독부는 계획 시행으로 각 농가가 ① 부족한 식량을 충원하여 춘궁을 없애고 ② 현금 수지(收支)의 균형을 유지하며 ③ 부채를 상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더불어 정무총감은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특이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기하였다.[19]

1. 갱생 계획 대상은 개인이며, 계획은 부락 내 각 호마다 수립한다.
2. **갱생 계획은 물질에 편향되지 않는 사상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둔다. 더불어 영농 관련 기술을 지도함에 그치지 않고 정신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둔다.**(강조-인용자) 이로써 가사(家事), 가정 등 생활 전반을 지도하여 분수를 지키는 생활을 확립하도록 한다.

위 통첩에 따르면 농가경제갱생계획의 대상은 개인이며 계획의 수립은 각 호마다 이루어졌다. 이 계획은 농가 경제를 갱생시켜 국가적 궁핍을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농 관련 기술 보급보다 '정신'을 개발하는데 오히려 중점을 두었다. 이때 조선총독부가 농가에 보급하고자 한 정신은 '숭고한 희생적 봉공심(奉公心)'과 '자기를 바치는 노력'이었다.[20]

'봉공(奉公)'은 '나라를 위해 힘쓰거나 관직에 임하여 국가를 위해 힘

19) 朝鮮總督府, 위의 책, 719~720쪽.
20) 朝鮮總督府, 위의 책, 721쪽.

www.kci.go.kr

쓰는 것'을 의미해 전근대 조선의 목민관(牧民官)이 지녀야 할 덕목 중에 하나로 여겨져 왔다.[21] 조선총독부는 국가를 위해 힘써 일하는 '봉공'이란 개념에 '개인의 희생'을 접목시켜 이를 '숭고'한 이미지로 탈바꿈시켰다. '숭고'라는 허울 좋은 외피를 두르고 있었지만, 실상은 국가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당연케 하는 일본식 '멸사봉공(滅私奉公)'이었다. 관리가 아닌 일반민에게도 국가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숭고한 희생 정신'을 함양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한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이 '숭고한 정신'을 선전하기 위해 향약 덕목인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에 주목하였다. 향약은 경제적 자립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민심을 지배 정책에 알맞게 '교화(敎化)'[22]하고 민풍을 '개선'할 수 있는 매개체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농촌진흥운동의 시행과 함께 각 지역 향약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23]

1932년 학무국장은 각 도지사에게 향약 조사를 실시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도록 하였다.[24]

> 오늘날 향약을 부흥하여 지방으로 확산시키면 효과를 얻기 쉬우니, 사회교화에 일조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사항을 조사해 보고하기 바란다.
>
> 1. 옛 향약이 어디까지 전승되어 왔는지, 현재 명칭이 어떠한지에 관계없이 향약 정신에 의해 시설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 명칭, 소재지, 연혁, 실시 규약, 가입자의 자격, 범위, 중심인물, 성적, 기타 참고 사항 등을 조사할 것.

---

21) 丁若鏞, 『與猶堂全書』 5, 「牧民心書」, 〈自序〉, 1b.

22) 이때의 교화는 전근대와는 달리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정책을 따르는 '순량한 신민(臣民)'을 양성하기 위한 '교화(敎化)'임을 밝혀둔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장려한 교화에 대한 사항은 다음의 논고를 참조. 설주희,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사회교화사업연구」,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23) 한미라,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향약 장려 정책」, 『역사와 실학』 60, 역사실학회, 2016. 107~109쪽.

24) 學務局長, 〈鄕約ニ關スル調査ノ件〉, 1932.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0004801, 문서번호 88-71.

www.kci.go.kr

2. 향약을 개선했거나 시설에 향약 정신이 가미된 곳이 있다면 위 사항을 조사할 것.
3. 옛 향약이 최근까지 전래 되어오다 중지된 곳이 있다면 소재지의 지명, 이전까지의 상황, 중지 원인을 조사할 것.

학무국장은 향약이 전승되고 있는 시설은 물론, 향약을 변형한 시설, 전래되다 사라진 시설까지 조사 대상으로 삼아 향약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전국에서 조사된 향약은 모두 2,570개였다.[25)]

이듬해인 1933년 학무국장은 '이전까지 각 지방에 보급되어 발달한 향약을 부흥시키는 것이 비교적 실현하기 용이'함을 밝히며 각 도지사에게 향약 사업 장려 보조금 지급 계획을 하달하였다. 학무국장은 도지사에게 보조금을 지급 받을 단체를 선정·보고하되 '향약 단체로써 업적이 있거나, 우수한 중심인물(中心人物)이 포함된 단체를 선정'하도록 지시하였다.[26)] 아래 표는 향약 보조금에 대한 지역별 할당과 신청 단체의 수를 나타낸 표이다.

〈표 1〉 1933년 향약 장려 보조금의 지역별 할당 규모와 신청 및 선정 단체 수 (단위 : 개)

| 지역 | 경기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
| 할당 수 | 12 | 7 | 9 | 9 | 12 | 12 | 12 |
| 신청 수 | 0 | 5 | 9 | 5 | 3 | 0 | 2 |
| 선정 수 | 0 | 5 | 2 | 5 | 3 | 0 | 2 |
| 지역 | 황해 | 평남 | 평북 | 강원 | 함남 | 함북 | 합계 |
| 할당 수 | 13 | 9 | 10 | 9 | 9 | 7 | **130** |
| 신청 수 | 3 | 2 | 10 | 9 | 9 | - | **57** |
| 선정 수 | 3 | 2 | 10 | 3 | 9 | - | **44** |

* 한미라,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향약 장려 정책」, 『역사와 실학』 60, 역사실학회, 2016, 114쪽, 121쪽 표 재편집.
** 함경북도는 향약 장려 보조금을 단체 보조금이 아닌 '도(道) 지방비'로 전용하여 보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신청 수에서 제외됨.

25) 한미라, 앞의 논문, 2016, 109~110쪽.
26) 學務局長, 〈鄕約事業奬勵補助ニ關スル件〉, 1933.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0004801, 문서번호 88-71.

www.kci.go.kr

위 표에 따르면 조선총독부는 총 130개 단체에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했으나 실질적인 신청 단체 수는 57개에 그쳤다. 1932년 전국적으로 설립된 농촌진흥회의 사업 성격과 향약의 활동 성격이 겹쳐 지역 입장에서는 굳이 향약 단체를 신설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학무국은 신청 단체 중 선정 조건에 맞는 44개 단체와 함경북도에 향약 장려 보조금을 지급하였다.[27]

이와 함께 학무국에서는 신설된 향약 단체와 기존에 있던 향약 단체를 막론하여 모든 향약 단체가 기본 덕목인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 외에 '생활개선(生活改善)'과 '산업장려(産業奬勵)'라는 두 개의 조목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이 덕목 외에도 실효를 거둘만한 조항이 있다면 지역별 실정에 따라 1~2개의 조목을 더 추가하도록 지시하였다.[28]

'생활개선'과 '산업장려'는 자력(自力)에 의한 생산성 고양으로 경제 갱생을 도모하려는 농촌진흥운동의 목적과 맞닿아 있다. 조선총독부는 촌락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의 생활을 향약 규약(또는 향약 단체의 구속력)으로 통제하여, 개인에게 적극적인 경제 활동의 수행을 종용하고 이로써 '봉공(奉公)'을 유도하였다. 결국 일제강점기 향약은 지역공동체 구성원에게 식민지배 정책에 적합한 생활방식을 강권하기 위해 '선택된 전통'이자 변형되어 '소환된 전통'이었다.

향약 덕목의 시행을 위해 결성된 향약 단체는 전국에 포진하여 해당 지역의 '민풍(民風)을 교화(敎化)'하는데 주력하였다. 더불어 향약 단체는 면·읍이나 동·리에도 설치돼 식민적으로 변용된 향약 덕목을 촌락 말단까지 주입시켰다. 각 단체는 자율적으로 활동하기보다 식민 행정 권력의 하달에 의해 운영되는 관변적 성격을 보였으며, 이는 함경북도와 평안남도, 그리고 전라북도의 향약 단체에서 특히 두드러졌다.[29]

---

27) 한미라, 앞의 논문, 2016. 115~122쪽.

28) 學務局長, 〈鄕約事業奬勵補助ニ關スル件〉, 1933.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0004801, 문서번호 88-71.

29) 한미라는 조선총독부로부터 향약장려보조금을 지원받은 향약단체의 임원 분석을 통해 지역별 향약단체의 조직적 특징과 활동 사항을 면밀히 살핀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

www.kci.go.kr

전라북도는 일제강점기 당시 최대의 쌀 생산지로 도민의 7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1920년대 후반부터 불어 닥친 불경기에 농민은 불가항력으로 부채를 떠안게 되었고, 곧이어 빈민으로 전락해 거주지를 떠나 일자리와 식재료를 찾아 유랑하였다. 전라북도 고등경찰과(高等警察課)는 192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민심(民心) 상황을 조사·보고하며 민심의 향방이 치안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30]

전라북도는 위 조사에 따라 '격화된 민심을 조직적인 사회교화 시설로 순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껴 사회교화 시설 증대를 추진하였다. 이때 전라북도는 사회교화 시설이 '지역의 민심을 수양(修養)·개량(改良)시킬 단체'여야 하며, 지역민의 사상선도와 생활개선을 이끌어 국가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주력해야 함을 재차 명시하였다.[31] 전라북도의 이러한 추진 목적은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향약 장려 사업의 목적과도 맞닿아 있었다.

## Ⅲ. 익산문묘의 경제 갱생 활동

1934년 9월 전라북도는 '구관(舊慣)에 얽매인 유림의 생활방식을 갱생'시키기 위해 도내 각 문묘에 향약을 조직하라는 방침을 하달하였다. 방침의 목적은 '산업경제 향상발달'과 '봉사정신 함양'에 있었다. '향촌사회의 사표(師表)인 도내 9,000여 명의 유림이 향약으로 각성하여 활동한다면 향촌 내 농촌진흥운동의 효과가 막대'할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32]

1935년 1월 익산군은 전라북도의 방침에 따라 익산군 내에 있는

---

고. 한미라, 「1930년대 향약 단체 운영과 단체장의 성향」, 『역사민속학』 52, 한국역사민속학회, 2017.

30) 高等警察課, 『大正十五年三月管內狀況』, 全羅北道, 1926; 高等警察課, 『大正十五年六月管內狀況』, 全羅北道, 1926; 全羅北道警察部, 앞의 책, 1932.

31) 全羅北道警察部, 앞의 책, 1932. 448쪽.

32) 『매일신보』, 1934년 9월 24일 기사, 「全北道內儒林團 鄕約發會式擧行 十月中으로各郡이全部發會 振興運動效果偉大」.

www.kci.go.kr

4개 문묘[33]에 각각 향약을 조직한 뒤 발회식을 거행하였다.[34] 현전하는 익산향교 향약 문서는 익산문묘 향약이 유일하기에 본고에서는 익산향교 그 중에서도 익산문묘 향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익산문묘 향약은 '향당의 미풍양속을 유지(維持)·조장(助長)하며 산업경제의 향상과 발달을 장려함과 동시에 공민(公民)으로써의 봉사정신 함양에 노력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한 향약 덕목으로 ① 덕업상권 ② 과실상규 ③ 예속상교 ④ 환난상휼 ⑤ 산업장려 ⑥ 공공봉사 ⑦ 생활개선이라는 7가지 덕목을 설정하였다.[35] ①~④는 전통적인 향약 덕목이지만 ⑤와 ⑦은 조선총독부가 지정한 덕목이었으며, ⑥은 익산향교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사항이었다. 조선총독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1~2개의 향약 덕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기 때문에 ⑥ 공공봉사 항목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36] 이 점에서 조선총독부에서 주도한 향약 설립 의도와 익산문묘 향약 덕목이 일치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익산문묘 향약과 식민지배 정책의 유사성은 향약 규칙에서도 나타난다. 이 향약은 약장(約長) 1인, 부약장 2인, 유사(有司) 약간 명을 두었고, 약정(約正)은 각 읍면당 1인을 두었다. 약장은 문묘 직원이 맡았으며, 약정은 해당 면장이 당연직으로 위촉되는 형식이었다. 당시 익산에는 8개의 면이 있었기에 8명의 약정이 당연직으로 위촉되었다. 이와 더불어 향약원이 임시총회를 열고자 할 때에는 익산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만 했고, 향약 규칙 개정안의 최종 결정권 역시 군수가 지니고 있었다.[37] 결국 익산문묘 향약은 지역민의 도덕적 교화가 아닌, 식민 행정의 촌락 기구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

33) 당시 익산향교는 익산문묘(益山文廟 또는 金馬文廟), 여산문묘(礪山文廟), 함열문묘(咸悅文廟), 용안문묘(龍安文廟)로 구성되어 있었다. 學務局, 〈鄕校ニ關スル調ニ關スル件〉, 1934, 474쪽.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0004809- 0027158494.

34) 『매일신보』, 1935년 1월 29일 기사, 「釜山郡內儒林 鄕約을 組織 美風維持와 經濟向上을 目標 廿八日發會式擧行」.

35) 益山鄕校, 『益山文廟鄕約』, 1935~1945, 9~11쪽.

36) 學務局長, 〈鄕約事業奬勵補助ニ關スル件〉, 1933.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0004801, 문서번호 88-71.

37) 益山鄕校, 『益山文廟鄕約』, 1935~1945, 6~8쪽.


www.kci.go.kr

외피는 지역공동체의 형식을 띠었지만 식민 행정 권력에 의해 배태된 익산문묘 향약은 활동 측면에서도 관변적 성격을 보였다. 본 향약은 각 덕목의 활동 세목을 규약에 기술하여 두었다. 전통적 향약 덕목 외에 새롭게 추가된 산업장려, 공공봉사, 생활개선에 해당하는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1935년 익산문묘 향약에 추가된 향약 덕목의 활동 세목

| 향약덕목 | 활동 세목 |
|---|---|
| 산업장려 | 자급자족 영농 생활, 자력(自力) 활용 농업 경영 |
| | 도읍면(道邑面)의 지도에 따라 보리, 밀, 조, 콩, 감자, 고구마, 육지면(陸地綿) 등의 밭 작물 재배 |
| | 소, 돼지, 닭, 누에, 벌 등의 사육과 가마니 짜기 등의 부업 수행으로 잉여 노동력 발생 금지 |
| | 퇴비 증산(堆肥增産), 녹비(綠肥) 재배, 화학비료 구매 비용 절약 |
| | 활엽수 벌채 금지, 어린 나무 보호 |
| 공공봉사 | 세금, 공과금 납기일 내 납부 |
| | 감사보은(感謝報恩), 개인 이득을 꾀하지 않는 공존공영(共存共榮) 정신 함양 |
| | 도로 수선, 교량 가설, 제방(堤防) 유지, 거리 청소, 전염병 예방, 마약 중독 방지 등에 솔선수범 |
| 생활개선 | 조혼(早婚) 금지 |
| | 풍수, 무속, 기도 등의 미신 금지 |
| | 흰 옷 착용 금지, 색복 착용 |
| | 혼례, 상례, 제례 시 허례허식 금지 |
| | 근검저축 |
| | 위생보건을 위해 부엌, 온돌, 우물, 화장실 위생 관리 철저 |

* 출전 : 益山鄕校, 『益山文廟鄕約』, 1935~1945, 9~11쪽.

산업장려, 공공봉사, 생활개선에 해당하는 활동 세목은 위 표와 같다. 익산문묘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향약 덕목인 '공공봉사'에는 '감사보은'과 '공존공영' 정신의 함양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1935년 4월 우가키 총독이 공표한 심전개발운동(心田開發運動)의 추진 목적과 동일한 측면이 있어, 본 향약의 활동 세목이 조선총독부의 영향권 내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38]

www.kci.go.kr

실행 세목은 대체적으로 근면(勤勉), 근검(勤儉), 자원 절약, 생산 능력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조선총독부는 일반민이 식량 부족 문제를 벗어나 자급자족하기 위해서는 밭작물과 잡곡을 재배하고[39] 농경 외에 부업을 수행하여 스스로 자본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40] 더불어 가정 내 소비와 자원 사용 비율을 줄여 축적된 자본으로써 세금과 공과금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해 '국민'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홍보하였다.[41] 이로 보아 향약 활동 세목이 조선총독부의 대민정책과 동일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향약은 지역민의 생활 방식까지도 향약 세목으로 규제하였다. 거리 청소, 조혼 금지, 미신 금지, 색복 착용, 위생 관리 등의 세목은 일본 제국주의가 '근대 생활'의 표본으로 홍보하며 식민지 조선에 강조한 생활 방식이다. 외형적으로는 '근대 국가에 걸맞은 생활 방식'으로 포장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일반민의 생활을 통제하여 통치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획책한 정책이었다.[42]

통치 비용 절감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 세목은 '공공봉사'에 속한 '도로 수선, 교량 가설, 제방(堤防) 유지' 항목에도 해당된다. 최근 연구

38) 朝鮮總督府中樞院, 『心田開發に關する講演集』, 1936, 2쪽; 朝鮮総督府學務局社会教育課, 『朝鮮社會教化要覽』, 朝鮮總督府, 1937, 31쪽.

39) 『동아일보』, 1935년 6월 23일 기사, 「自給自足을目標코 雜穀增殖을計劃」; 『동아일보』, 1935년 12월 18일 기사, 「定例局長會議」.

40) 『조선신문』, 1935년 1월 22일 기사, 「忠淸南道, 畜牛營養保全に大豆葉の摘採貯藏, 豫期以上の成績を收む」; 『매일신보』, 1935년 1월 25일 기사, 「五個年計劃으로 畜牛增産과 生飼 十年度부터 着手實行키로 平南道에서 立案」; 『조선신문』, 1935년 1월 15일 기사, 「京畿道, 畜牛の大市場素砂の牛ぬす人, 忽ち永登浦で御用, 此奴耕牛專門のしたたか者」.

41) 『부산일보』, 1935년 2월 10일 기사, 「八十萬圓の滯納に惱む」; 『동아일보』, 1935년 2월 21일 기사, 「年三千萬圓消費의 金肥는自給自足」; 『매일신보』, 1935년 4월 1일 기사, 「金堤一郡의 農民貯金 十六萬圓의 巨額 團體二四一, 個人萬九千名 可驚할 勤儉心向上」; 『동아일보』, 1935년 5월 16일 기사, 「府民이바칠稅金八十四萬五千圓」.

42) 이와 관련된 사례로 평안남도청에서 작성한 '백의(白衣) 경제성 조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33년 평안남도청은 흰 옷을 폐지하였을 때 연간 27,500,000원(圓)의 세탁비와 15억 시간의 세탁 시간이 절약된다고 보도하였다. 당시 흰 옷은 세탁 필요성이 색복보다 높기 때문에 부녀자의 노동력을 빼앗아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사회적 장애물로 여겨졌다. 이로 보아 당시 식민권력은 식민지 일반민의 생활 방식을 경제적 효율성으로 환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아일보』, 1933년 11월 3일, 「色衣와 斷髮」.

www.kci.go.kr

에 따르면 조선총독부는 강점 초기부터 '공익(公益)'을 위한 개인의 기부를 장려하며 이를 포상(褒賞)하였다. 특히 1935년 이후부터는 재산을 기부해 교육, 문화, 치안, 관공서, 위생, 교통, 농업 시설을 구축한 인물을 포상하는 빈도가 급증하였다.[43] 본 향약 역시 세목에 '공공봉사'라는 명목을 세워 도로 보수와 교량 가설, 제방 보수 비용을 개인의 기부로 수행하게 하였다. 이 역시 조선총독부가 통치 비용의 절감을 위해 식민지 인프라 구축 비용을 개인에게 전가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익산문묘 향약 규약은 본 향약이 식민 행정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나타낸다. 때문에 이 향약은 지역공동체의 도덕적 교화에 힘쓰기보다 조선총독부의 지배 정책을 촌락에 보급시키는 역할에 집중하였다. 향촌 일반민의 일상을 규제하여 노동을 강조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근검한 생활을 유지시켜 식민지의 경제 생산성 확충을 유도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식민 행정 권력이 익산문묘 향약의 동원을 통해 경제 생산성을 제고하려 한 특징은 익산문묘 향약의 실제 활동에서도 나타난다.

조선총독부는 행정 위계를 활용해 익산문묘 향약을 동원하였다. 이때 동원은 향약이 지닌 재산 또는 향약 구성원이 지닌 재산을 식민통치에 흡수하려는 '물질적 동원'과 향약 구성원의 신체를 식민지배체제에 적용시키는 '인적 동원'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다. 본 장에서는 익산문묘의 활동을 물질적 동원과 인적 동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물질적 동원

1935년 2월 14일 익산군수는 각 문묘 향약장에게 '향약 사무는 각 향약 규칙을 따르되, 특별히 재무에 관한 예산 장부는 별지 양식대로

43) 일본 정부의 포상 빈도는 일제 초기 급증하였다가 1921년 이후 감소하였고, 1935년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이는 일본 정부의 대민정책 방향성에 기반한 결과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고. 박선영, 「식민지 조선의 포상정책 연구」,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20.

www.kci.go.kr

작성하여 총회 때마다 제출'하도록 하였다.[44] 본 문서에 첨부된 예산 보고서는 수입·지출별 예산 항목, 예·결산액, 예산 증감률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이 사항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이외의 현금 자산을 별도로 기재 하여 일별, 월별 누계액을 보고하도록 한 점이다.

현금 자산 보고는 '현금수납부(現金收納簿)'라는 표제를 취하고 있다. 현금수납부의 기재 항목은 금액, 수납 연월일, 납입 사유, 납입자 주소로 되어 있어 향약원이 납부하는 향약비 보고서임을 알 수 있다. 현금수납부 후면에는 '향약 가맹 신청서' 양식이 첨부되어 있다. 본 공문서철과 함께 보관되어 있던 〈익산문묘 향약 가입 신청서〉철 역시 본 양식에 준하여 작성되어있다. 이를 통해 익산군수가 익산문묘 향약 가입 신청서는 물론 가입비와 가입자 인적 사항, 향약 자산의 출처와 사용처까지 모두 관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향약 정보에 대한 요구는 면장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일례로 1937년 6월 17일 금마면장은 익산문묘 직원에게 '향약 조사의 건'이라는 공문서를 발송하였다. 공문에는 '군(郡)에 보고할 일이 있으니 향약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해 제출할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다음 표가 부기되었다.

〈표 3〉 1937년 6월 익산문묘 향약 조사 항목

| 향약회원 수 | 향약 회원 직업 | | | 향약 자산 | | | |
|---|---|---|---|---|---|---|---|
| | 농업 | 상공업 | 기타 | 현금 | 토지 | 건물 | 기타 |
| 명 | 명 | 명 | 명 | 엔 | 평 | 동 | 엔 |

* 출전 : 益山文廟, 《諸關係書類》, 1937.

두 달 후인 8월 9일 금마면장은 재차 익산문묘 향약장(鄕約長)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향약 인원수와 함께 역원(役員)과 약원(約員)의 이름, 주소, 직업을 상세히 기록하여 가능한 빨리 제출하도록 독촉하였다. 본

44) 益山鄕校, 『益山文廟鄕約』, 1935~1945, 28쪽.

www.kci.go.kr

공문과 〈표 3〉에서도 알 수 있듯 익산군수와 금마면장은 향약원의 인적 사항과 함께 약원 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군(郡)과 면(面)이 익산문묘 향약의 현금 보유량과 향약원 수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향약에서 산출되는 현금을 통치 비용의 일부로 동원하기 위함이었다. 1937년 향약 총회 의결 사항 보고에 따르면 향약 가입금은 문묘에서 현금으로 보유하지 않고 전량 금마우편소(金馬郵便所)에 저금하도록 명시되어 있다.[45] 조선총독부는 전시체제가 가시화된 이후부터 일반민에게 '우편국(郵便局)을 통한 저축'을 장려하였다. '저축으로써 국부(國富)를 이룩'하여야 '국방(國防)을 충실'히 할 수 있음을 선전한 것이다.[46] '저축'은 익산문묘 향약 덕목인 '생활개선'의 실행 세목과도 겹쳐 익산문묘 향약 재산 역시 전시 자금으로 흡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군 당국은 향약 자산 이외에도 향약원의 개인 재산까지 동원하여 전시 자금으로 편입시켰다. 1937년 10월 17일 익산문묘가 익산군에 한 보고에 따르면, 당시 총회에 출석한 향약원 97명 중 95명이 개인 재산을 갹출하여 64엔 90전을 모았고, 이를 '황군위문금(皇軍慰問金)'으로 납부하였다.[47] 더불어 1938년 4월부터 1943년 10월까지 익산문묘 향약의 주된 활동 가운데 하나가 '출정군인 전몰자 가족 위문'이었고, 익산문묘는 전몰자 가정 방문 사실을 지속적으로 군 당국에 보고하였다. 결국 조선총독부는 익산문묘 향약을 통해 향약 재산과 개인의 재산을 전시 자금으로 동원하고, '환난상휼'이라는 향약 덕목을 식민지적으로 재해석하여 전몰자 가족의 상실감과 반식민지적 감정을 무마시키려 하였다.

군 당국은 더 많은 향약 재산과 개인 재산을 통치 비용으로 동원하기 위해 익산문묘에 향약원 증가를 종용하였다. 본 향약은 향약원 가입 자격을 '익산문묘 관할 구역 내 유림'으로 한정하였기에 가맹원의 무제한적 확장은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1935년 8월 129명에 불과하였던 향약원이 1936년 2월 231명으로 증가하였다. 불과 6개월 만에 102명이

45) 益山文廟, 『昭和十年以後諸關係書類』, 1935~.
46) 『동아일보』, 1937년 6월 4일 기사, 「于先,國防을充實 産業經濟政策樹立」.
47) 益山文廟, 『昭和十年以後諸關係書類』, 1935~.

www.kci.go.kr

추가 가입된 것이다.[48]

조선총독부는 향약 외 다른 유교 단체의 증설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1937년 4월 경학원 대제학(大提學)은 익산문묘를 비롯한 각 문묘에 다음과 같은 공문을 하달하였다.[49]

> 향교를 중심으로 유림단체(명륜회, 명덕회, 유림회, 유림계, 향약계, 모성계 등)를 조직하도록 한다. 유림단체 회원을 늘려 자본력을 축양(畜養)해 심전개발운동에 공급하고, 문묘를 영구히 봉찬(奉讚)하는 기관으로 조성한다. 또 장래 조선유림 단체 연합회 통제기관을 구성할 때 이것으로 이바지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1937년 경학원은 향교를 구심점으로 한 다양한 유교 단체를 조직하도록 명령하였다. 그 목적은 유교 단체 회원의 자본력을 한 곳으로 모아 조선총독부의 통치 비용에 활용하고, 이후 조선 유림을 통제하는 단체를 조직할 때 이 자금을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위 공문이 하달된 지 1년 후인 1938년 4월 익산문묘에 모성계가 조직되었고, 계원 모두 5원(圓)씩을 납부하였다. 모성계 자산 활용 보고는 줄곧 향약 총회에서 이루어졌고, 향약장은 향약 자산 내역과 함께 모성계 자산 내역 또한 군 당국에 보고하였다. 보고는 향약 총회가 있던 4월과 10월, 매년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보고는 해방 직전인 1945년 4월까지 지속되었다.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총독부의 행정 위계를 통해 익산문묘 향약을 장악하고 이를 통제 기반으로 삼았다. 군 당국은 향약 가입 신청서부터 양식을 지정하여 배포하였고, 해당 향약에 가입한 향약원의 인적 사항과 인원수 역시 조사·보고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군 당국은 향약이 지닌 부동산 자산과 함께 현금 자산 활용 내역까지 보고하도록 해 향약 재산 상태를 파악해나갔다. 이후에는 향약 재산뿐만 아니라 향약에 가입한 개인 재산의 흡수까지 의도하였다.

---

48) 益山鄕校, 『例規』, 1935~1945.

49) 益山鄕校, 『例規』, 1935~1945, 24쪽.

www.kci.go.kr

조직적으로 동원된 익산문묘 향약 재산과 향약원 개인 재산은 일본 제국주의의 전시 자금으로 편입되었다. 경학원은 각 문묘에 유교 단체를 추가로 조직하여 더 많은 이들의 자산력을 전시 자금에 편입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익산문묘에도 모성계가 추가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익산문묘 향약과 모성계 재산은 해방 직전까지 군 당국에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 조선총독부는 행정 체계를 활용해 익산문묘 향약 재산을 전시체제에 동원하고자 하였고, 보다 수월한 전시 동원을 위해 향약원 개인의 신체 동원까지 기도하였다.

## 2. 인적 동원

익산문묘 향약의 인적 동원은 사상 '교화(敎化)'를 기반으로 하였다. 강연을 통한 사상의 순화(純化)로 식민지민의 자발적 동원을 견인하려 한 것이다. 익산문묘는 춘·추계 석전제를 수행하는 날에 향약 총회를 개최하였다. 1935년 4월 처음 개최된 제1회 향약 총회에서 향약 활동 보고와 향약 재산 예·결산 보고가 있었고, 곧바로 강연회가 개최되었다. 이 식순은 1945년 4월까지 10년간 지속되었다. 강연회 강사는 대부분 군수였으며, 군수가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군청 소속의 서무주임(庶務主任), 내무주임(內務主任), 교화주사(敎化主事), 촉탁(囑託)이 대리로 강연을 하였다. 이외에도 학교장(學校長), 면장(面長) 역시 강연에 나섰다. 강연자가 관공리로 구성된 이유는 강연의 개최 지시가 군수를 통해 하달되기 때문이다.

1937년 추계 석전제 공문에는 강연회 개최 프로세스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기에 일례로 1937년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937년 8월 28일 익산군수는 '조선총독의 훈시에 따라 시국인식 강연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통첩을 익산문묘에 하달하였다. 이 통첩에는 강연회 장소와 일시, 강사까지 지정되어 있었다. 다음날인 8월 29일 익산문묘 직원은 각 면장과 다른 문묘의 장의·유사에게 강연 일시를 통지하면서 해당 강연회에 유림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는 당부를 첨언하였다. 일주일 후인 9월 6일 오전, 익산문묘에서 추계 석전제가 열렸고, 당일 오후 1시부터 향약 총회와 함께 시국인식 강연회가 개최되었다.

www.kci.go.kr

2일 뒤인 9월 8일 익산문묘 직원은 강연회 내용과 참석 인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경학원에 보고하였다.[50]

관이 개입하여 계획·개최하였기에 강연 내용은 관변적이고, 조선총독부 정책에 친연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1935년 추계 석전제 당시 익산군수의 강연 주제는 '동양교화(東洋敎化)'였는데 그 내용은 '일본제국이 동양 평화의 건설과 발전을 기하는데 조선의 유림이 동참해줄 것'에 대한 당부였다. 더불어 군수는 '유림은 오래된 관습과 그릇된 습관을 버릴'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51]

군수 강연 이후 익산군 소속 교화주사 김인수(金仁洙)의 강연이 이어졌다. 김인수는 '사회문물의 향상과 발전'을 강의 주제로 하였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조선총독부에서 지정한 '의례준칙을 지역 사회에 철저히 전파하여 저축금액을 늘리고, 근검절약을 생활화'하라는 지침 안내였다.[52] 이 역시 식민정책에 대한 홍보였다. 본 강연 이후 익산문묘 향약은 의례준칙에 따라 색복착용의 생활화를 결의하였고, 흰 옷 착용자는 다음 향약 총회부터 참석할 수 없도록 공표하였다.[53]

1936년 9월 추계 석전제 강연은 내무주임이 맡아 '정신작흥'을 주제로 하였고, 이후에는 금마면장의 '유림에 대한 주의(注意)'라는 강연이 이어졌다. 본 강연은 제목만 보고되어 있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1936년 6월 일본 문부성에서 '국민정신작흥'의 중요성을 대대적으로 강조하고, 7월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이 '국민정신작흥의 날'을 지정한 시대상을 고려한다면 본 강연 역시 식민 정책 홍보를 위해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54]

1936년에 고안되어 193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국민정신작흥운동'은 중일전쟁의 장기화를 대비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었다. 국민정

50) 益山文廟, 『諸關係書類』, 1937, 92~96쪽.
51) 益山鄕校, 『例規』, 1935~, 35쪽.
52) 益山鄕校, 『例規』, 1935~, 39쪽.
53) 益山鄕校, 『例規』, 1935~, 41쪽.
54) 『동아일보』, 1936년 6월 20일 기사, 「文部省所管의 地方長官會議」; 『동아일보』, 1936년 7월 29일 기사, 「朝鮮民曆改正 學務局長談을 發表」.

www.kci.go.kr

신작흥운동이란 국가의 승리를 위해 국민이 희생을 참고 견디는 정신 즉, '견인지구(堅引持久)' 정신을 사회에 전파시켜 '국민을 하나의 사상으로 총동원시키는 일대 운동'이었다.[55] 익산군은 장기전 대비를 위해 익산문묘 향약 총회를 동원하여 지역민에게 국민정신작흥운동에 대한 홍보를 수행하였던 것이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부터 강연 내용은 '동양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유교의 진흥' 다시 말해, '황도유학(皇道儒學) 진흥'으로 귀결되었다. 특히 1940년 이후부터 조선유도연합회와 조직적으로 연대하여 황도유학 강연을 실시하였는데, 황도유학 강연의 목적은 다음과 같았다.[56]

> 올해 7월 16일 조선유도연합회 교육부장 안인식(安寅植) 씨가 파견되어 황도유학 강연회를 진행하였다. 유림 및 청년단원을 익산문묘 명륜당에 모이게 하여 징병제도 실시에 관한 강연을 한 뒤, 황도유학 강연을 이어갔다. 대동아전쟁과 인고지구(忍苦持久) 정신을 앙양하게 할 목적이었다.

본 강연은 표면적으로 유교 문화 진흥이나 유교 연구를 진작시키는 내용이었지만, 실질적인 목표는 식민지 조선의 청년을 전장으로 징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본 강연에 모인 청년에게는 '황군(皇軍)'의 의무가 주어졌고, 향약원에게는 사회적 사표(師表)의 지위를 활용하여 청년의 지원을 유도케 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때문에 익산문묘 유림들은 익산지역에 징병검사가 실시될 때 검사소에 배석하거나,[57] 조선총독부의 징병 제도 실시 취지를 촌락 사회에 널리 알리는 등의 활동을 하여야만 했다.[58]

한편 향약원에게는 '총후(銃後) 전사'의 임무 역시 주어졌다. 총후 전사의 임무란 전장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생활 전선에서 '국민총

55) 『동아일보』, 1937년 10월 3일 기사, 「國民精神作興週間」.
56) 益山鄕校, 『例規』, 1935~, 91쪽.
57) 益山文廟, 『諸關係書類』, 1944, 87쪽.
58) 益山文廟, 『諸關係書類』, 1943, 66쪽.

www.kci.go.kr

력운동에 기초한 생산 확충 계획을 생활화하여 국가에 이바지 해야하는 책무'였다.[59] 생산 확충 계획은 1938년 일본 내각에서 입안한 4개년 계획 정책으로 '일본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방산업 진흥'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이 정책의 시행에 따라 국민은 국방산업에 필요한 물자 즉, 철강, 석탄, 경금속, 니켈, 석유 등의 소비를 줄이고, 국가 생산성과 자본 융통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력 증강에 협조해야 했다.[60]

1941년 춘계 석전제 강연 이후 익산문묘 향약원들은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정신으로 생산 확충 실행 계획에 철저히 임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후 9월에 열린 추계 석전에서 금마면장은 '생산 확충 계획과 물자 절약 운동'에 대한 강연을 하였고, 이 날부터 익산문묘 향약 주요 활동에 '식량 절약', '저축 장려', '미곡 증산', '생산 증강'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듬해인 1942년 익산문묘가 익산군수에게 발송한 향약 활동 사항 보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61]

> 1. 저축 장려 및 식량절약의 건
>
> **저축장려에 대해서는 면 당국으로부터 1년간 저축 목표액을 지시를 받았다.**(강조-인용자) 이에 따라 현금 저축은 물론 생명보험금 지불, 국채채권 소화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목표액을 달성하고자 노력중이다. 식량 절약에 대한 당국의 통고가 있어 보리 공출량에 따른 공출을 완료하였다. 식량 절약주의로써 대용식으로 1일 2식 주의를 실행하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 2. 미곡 증산 실행의 건
>
> 미곡 증산 실행에 대해서는 먼저 퇴비의 증산에 힘을 써 적당한 시기에 모내기를 하고 제반 준비를 적절하게 행하여 수확량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

59) 益山鄕校, 『例規』, 1935~, 41~106쪽.
60) 『동아일보』, 1939년 2월 22일 기사, 「生産力擴充 四個年計劃」.
61) 益山鄕校, 『例規』, 1935~, 99쪽.

www.kci.go.kr

익산문묘 향약의 생산 확충 계획에는 면에서 지정한 구체적인 수치가 부여되어 있다. 면 당국은 익산문묘에 연간 저축 목표액, 현금 저축액, 보리 공출량 등의 목표량을 지정해 명확한 수치를 제시하였다. 1937년 익산군은 익산문묘 향약의 활동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아 활동의 우수성이나 부족성을 가늠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향약원들은 활동 목표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로 결정하였고, 결의로 인해 생산 확충 계획에도 구체적인 수치가 지정되었다.[62] 이처럼 향약 총회 보고는 활동 사항 보고에 그치지 않고 활동의 실제적 성과까지 감시·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생산력 증강 장려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63]

> 대동아 전쟁은 결전 단계에 이르렀다. 적군(敵軍)인 미국과 영국은 풍부한 자원과 생산력을 동원하여 우리를 반격할 계획을 꾸리고 있다. 이번 가을 우리 1억 국민은 모두 죽음을 결심한 전사가 되어 생산 증강에 온 마음과 온 힘을 기울여 무력전(武力戰)과 경제전(經濟戰)에서 필승하여야 한다. 때문에 단 한 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하지 않고 노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모든 유림은 궐기하여 그 능력에 따라 생활 증강에 노력해 봉공(奉公)의 정성을 거두어야 한다.

1943년 6월 익산군은 당시의 전시 상황을 '무력전(武力戰)'과 '경제전(經濟戰)'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무력과 더불어 경제 역시 전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여겼기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 전체가 노동에 힘써 국가에 '봉공(奉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익산문묘 향약원들은 매년 2단보(段步)의 논을 공동으로 경작하여 해당 경지에서 산출되는 미곡을 국방비로써 헌납하기로 결정하였다.[64]

익산문묘 향약은 조선총독부에 의해 배태되어 촌락 공동체의 활동

62) 益山鄕校, 『例規』, 1935~, 55쪽.
63) 益山文廟, 『諸關係書類』, 1943, 66쪽.
64) 益山鄕校, 『例規』, 1935~1945, 106쪽.

www.kci.go.kr

과 여론을 식민 통치에 적합한 형태로 형성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익산문묘 향약원 개인의 사상까지 교화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 1944년 익산군수가 익산문묘 향약에 보낸 공문서에 따르면 '징병 검사소 내 유림의 배석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나, 유림의 참석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참석을 유도하였다. 더불어 익산군수는 '대다수 유림이 자동차 고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니 이번 검사부터는 도보나 기차를 이용'하여 참석할 것을 강조하였고, '혹 참여가 어려울 때는 결석 사유를 사전에 밝히고 본인을 대신할 인물을 보내라'고 하였다.[65] 향약 총회 등의 보고 문건에는 익산문묘의 향약 활동이 식민 정책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활동 양상은 이와 달랐다.

그 원인은 식민 행정 권력에 의해 배태된 익산문묘 향약의 태생적 한계를 꼽을 수 있다. 지역민의 자발적인 필요성에 의해 구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행정 권력의 압력에 의해 조직된 단체였기에 단체 내부 조직력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때문에 향교 외부에 있던 이들은 당시 향교의 활동을 '왜노(倭奴)에게 아첨하여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한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66] 조선총독부는 익산문묘 향약에 행정적 압력을 가해 일반민을 '동원'하는 데 일정 정도 성공하였지만, 향약원 개인의 사상까지 식민체제에 완벽히 '동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조선총독부는 국가 경제가 위기에 직면하자 일반민을 동원해 폐색된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동원 이데올로기의 저변에는 일본형 유교 윤리의 특징인 국가주의적 '공(公)'이 결합되어 있었고,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이 사회적 선(善)으로 탈바꿈되기에 이르렀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에 새로운 형태의 단체를 설립·운영케 하여 국가주의적인 공이 촌락 말단까지 전파되도록 유도하였다. 이 때 '향약'이라는 전통의 소환이 이루어졌고, 전통 덕목에 식민주의적 운영 원리가 더해

65) 益山文廟, 『諸關係書類』, 1944, 87쪽.
66) 李道衡, 全州衛聖案重刊所 編, 『(重刊)全州衛聖案』, 1954, 8쪽.

www.kci.go.kr

져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재편되었다. 향약은 행정적 위계를 활용하여 촌락민의 경제적, 신체적 동원을 의도하였지만 촌락민의 사상까지 식민주의에 동화시킬 수는 없었다.

## Ⅳ. 결론

1920년대부터 연달아 발생한 공황으로 1930년 일본 경제는 만성적 위축 상황에 직면하였다. 조선총독부는 경제를 활성 시킬 방안으로 농가가 자체적으로 경제 갱생을 도모하는 '농가경제갱생계획' 즉, 농촌진흥운동을 수립·시행하였다. 농촌진흥운동은 농가 경제를 갱생시켜 국가적 궁핍을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었지만 영농 관련 기술의 보급이 아닌 농민의 '정신'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만큼 식민지민의 정신적 '동화'는 최우선 과제였다.

조선총독부가 농가에 보급하고자 한 정신은 '숭고한 희생적 봉공심(奉公心)'과 '자기를 바치는 노력'이었다. 조선총독부는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하는 '봉공'이란 개념에 '개인의 희생'을 접목시켜 이를 '숭고'한 이미지로 탈바꿈시켰다. '숭고'라는 허울 좋은 외피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국가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당연케 하는 일본식 '멸사봉공(滅私奉公)'이었다. 일본식 유교 윤리의 특징인 '공(公)'은 일반민에게도 국가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숭고한 희생 정신'을 함양하도록 작동하였다.

1932년 조선총독부는 이 '숭고한 정신'을 유도하기 위해 조선 사회에서 통용되던 향약 덕목인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에 주목하였다. 향약의 특성상 경제적 자립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민심을 지배 정책에 알맞게 '교화(敎化)'하고 민풍을 '개선'할 수 있는 덕목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933년 학무국장은 '이전까지 각 지방에 보급되어 발달한 향약을 부흥시키는 것이 비교적 실현하기 용이'함을 밝히며 신설된 향약 단체와 기존에 있던 향약 단체를 막론하여 모든 향약 단체에 기본 덕목인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 외에 '생활개선(生活改善)'과 '산업장려(産業奬勵)'라는 두 개의 조목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이 덕목 외에도

www.kci.go.kr

실효를 거둘만한 조항이 있다면 지역별 실정에 따라 1~2개의 조목을 더 추가하도록 지시하였다.

조선총독부가 추가적으로 지시한 '생활개선(生活改善)'과 '산업장려(産業奬勵)'는 자력(自力)에 의한 생산성 고양으로 경제 갱생을 도모하는 농촌진흥운동의 목적과 맞닿아 있다. 조선총독부는 촌락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의 생활을 향약 규약으로 통제하여, 개인에게 적극적인 경제 활동의 수행을 종용하고 이로써 '봉공(奉公)'을 유도하였다. 결국 일제 강점기 향약은 지역공동체 구성원에게 식민지배 정책에 적합한 생활방식을 강권하기 위해 마련된 '선택된 전통'이자, 변형되어 '소환된 전통'이었다.

조선총독부의 장려에 따라 1935년 1월 익산문묘(益山文廟)에 향약이 신설되었다. 익산문묘 향약은 '향당의 미풍양속을 유지(維持)·조장(助長)하며 산업경제의 향상과 발달을 장려함과 동시에 공민(公民)으로써의 봉사정신 함양에 노력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한 향약 덕목으로 ① 덕업상권 ② 과실상규 ③ 예속상교 ④ 환난상휼 ⑤ 산업장려 ⑥ 공공봉사 ⑦ 생활개선이라는 7가지 덕목을 설정하였다. ①~④는 전통적인 향약 덕목이었지만 ⑤와 ⑦은 조선총독부가 지정한 덕목이었으며, ⑥은 익산향교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사항이었다. 조선총독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1~2개의 향약 덕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기 때문에 ⑥ 공공봉사 항목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외피는 지역공동체의 형식을 띠었지만 식민 행정 권력에 의해 배태된 익산문묘 향약은 활동 측면에서 관변적 성격을 보였다. 지역공동체의 도덕적 교화보다 조선총독부의 지배 정책을 촌락에 보급시키는 활동에 주력하였다. 조선총독부는 향약이 지닌 재산 또는 향약 구성원이 지닌 재산을 식민통치에 흡수하려는 '물질적 동원'과 향약 구성원의 신체를 식민지배체제에 적용시키는 '인적 동원' 두 가지를 목적으로 설정하고 향약을 동원하였다.

익산문묘 향약 재산과 개인의 재산은 일본 제국주의의 전시 자금으로 편입되었고, 경학원은 각 문묘에 유림 관련 단체를 추가 조직하여 더 많은 이들의 자산력을 전시 자금에 편입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익산문묘에 모성계가 추가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익산문묘 향약과 모성계

www.kci.go.kr

재산은 해방 직전까지도 군 당국에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 조선총독부는 행정권력을 활용하여 익산문묘 향약 재산을 전시체제에 동원하고자 하였고, 보다 수월한 전시 동원을 위해 향약원 개인의 신체적 동원까지 기도하였다.

익산문묘 향약의 신체적 동원은 사상 '교화(敎化)'를 기반으로 하였다. 때문에 강연을 통한 사상의 순화(純化)로 식민지민의 자발적인 동원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강연자는 관공리였는데, 그 이유는 강연회가 하달식 행정 명령으로 계획·개최되었기 때문이었다. 강연회 내용은 대체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정책에 대한 홍보와 일반민의 정책 참여 독려였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부터는 징병제와 전시 생활 방식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졌다. 이후 전시경제가 악화되는 1940년대 이후에는 경제 역시 전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여겨져 국민 전체가 노동에 힘써 국가에 '봉공(奉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익산향교 향약원들은 매년 일정 정도의 논을 공동으로 경작하여 해당 경지에서 산출되는 미곡을 국방비로 헌납하거나 저축량, 노동시간, 식량 절약률을 증가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익산문묘 향약은 조선총독부에 의해 배태되어 촌락 공동체의 활동과 여론을 식민 통치에 적합한 형태로 형성시키고자 활동하였다. 하지만 지역민의 자발적인 필요성에 의해 구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행정 권력의 압력에 의해 조직된 단체였기에 단체 내부의 조직력은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었다. 조선총독부는 익산문묘 향약에 행정적 압력을 가해 일반민을 '동원'하는 데 일정 정도 성공하였지만, 향약원 개인의 사상까지 식민체제에 완벽히 '동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www.kci.go.kr

## | 참고문헌 |


Ⅰ. 원전류

『동아일보』

『매일신보』

『조선신문』

『부산일보』

李道衡, 全州衛聖案重刊所 編,『(重刊)全州衛聖案』, 1954.

益山文廟,『昭和十年以後諸關係書類』, 1935~.

益山文廟,『例規』, 1935~1945.

益山文廟,『益山文廟鄕約』, 1935~1945.

益山文廟,『諸關係書類』, 1937.

益山文廟,『諸關係書類』, 1943.

益山文廟,『諸關係書類』, 1944.

全羅北道高等警察課,『大正十五年三月管內狀況』, 全羅北道, 1926.

全羅北道警察部,『細民の生活狀態調査』 第二報, 1932.

朝鮮社會事業協會,『朝鮮社會事業』4, 朝鮮社會事業協會, 1930.

朝鮮總督府,『朝鮮』4,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1930.

朝鮮總督府,『朝鮮』5,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1930.

朝鮮總督府,『施政二十五年史』, 朝鮮總督府, 1935.

朝鮮總督府,『施政三十年史』前篇, 朝鮮總督府, 1940.

朝鮮總督府中樞院,『心田開發に關する講演集』, 1936.

朝鮮総督府學務局社会教育課,『朝鮮社會教化要覽』, 朝鮮總督府, 1937.

Ⅱ. 저서·논문류

권익산,「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의 익산향교(益山鄕校) 연구(硏究)」,『청람사학회』13, 청람사학, 2006.

김명우,「일제강점기 향교 直員과 掌議」,『중앙사론』25, 한국중앙사학회, 2007.

김태창 편저, 조성환 역,『공공철학』, 동방의빛, 2010.

미즈노 나오키,「식민지 조선의 사상정화공작(思想淨化工作)과 향약(鄕約)·


www.kci.go.kr

자위단(自衛團)」, 『공존의 인간학』 2,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2019.
박선영, 「식민지 조선의 포상정책 연구」, 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박지향, 『제국주의:신화와 현실』,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서동일, 「함양향교 소장문서에 나타난 총동원체제기 조선총독부의 향교 동원과 변형」, 『국학연구』 40, 한국국학진흥원, 2019
설주희,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사회교화사업(社會敎化事業) 연구」, 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정승진, 「위계적 복합공간으로서의 식민도시, 이리」, 『아세아연구』 150,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2.
최병택, 「1920년대 말~1930년대 전반기 조선총독부의 미곡창고 설립과 그 운영의 변화」, 『역사교육』 130, 2014.
한미라, 「日帝 植民地時期 鄕校 硏究」,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한미라, 「일제의 식민정책과 향약 인식-1920년대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49, 한국역사민속학회, 2015.
한미라,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지방 통치와 향약 정책」,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한미라,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향약 장려 정책」, 『역사와 실학』 60, 역사실학회, 2016.
한미라, 「1930년대 향약 단체 운영과 단체장의 성향」, 『역사민속학』 52, 한국역사민속학회, 2017.
한미라, 「1930년대 전라남도 향약의운영 양상과 성격변화-「鄕約事業補助事業」과 「地方改良補助關係」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53, 한국역사민속학회, 2017.
한미라, 「식민지기 유림대회의 출현과 지방의 유교권력」, 『역사학보』 241, 역사학보, 2019.
한미라, 「19세기 후반 경상도 함양 栢吐里鄕約의 구성과 재정운영」, 『역사와 실학』 72, 역사실학회, 2020.
한형조 외, 『500년 공동체를 움직인 유교의 힘』, 글항아리, 2013.

www.kci.go.kr

| Abstract |

# Establishment of Hyangyak(鄕約) in Iksan-hyanggyo(益山鄕校) and Community Activities During Japanese Colonial Era

Seol Juhee
| Jeonju University ICSK

The economy of Japanese imperialism shrank in 1930 due to the economic depression that continued from 1920s.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he policy, where villages independently rehabilitated economy, in order to revitalize the economy of the Colonial Joseon. This was the so-called 'Rural Development Movement.' This policy aimed to solve country's poverty through the revival of rural economy. However, it focused on changing farmers' 'thoughts' rather than spreading farming techniques. It attempted to execute the colonial policy smoothly by assimilating farmer's thoughts to colonialism.

The spiri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spread to villages was the 'spirit of sacrifice that even sacrifices one's life for the country.' At this time, sacrifice was promoted as a noble image. In 1932,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brought back and implemented Hyangyak(鄕約) that had been commonly used in pre-modern Joseon society in order to encourage spirit of sacrifice in people. Due to the nature of Hyangyak, it was socially appropriate to promote the good, be aware of the bad, and help the ones in need. Therefore, Japanese Government-General

www.kci.go.kr

of Korea believed that Hyangyak would play a significant role in economic revival and dominating public sentiment. Hyangyak that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mplemented was added with the additional goals, 'industrial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life', in addition to the existing Hyangyak.

In accordance with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s encouragement of Hyangyak, Hyangyak was newly established in Iksanhyanggyo Confucian School in January 1935. On the outside, it was in the form of a community but, in fact, was an official organization created and encouraged to be implemented by the administration of imperialism. Therefore, this Hyangyak focused on spreading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s ruling policies to villages rather than ethical reformation of local residents.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bsorbed the asset owned by Hyangyak and individual asset of the members of Hyangyak as colonial funds. Also, it attempted to convert the ideology of individual members of Hyangyak to pro-colonialism through continuous lectures. Since the outbreak of the Sino-Japanese War in 1937, the activities of Hyangyak changed. It was to change the mass of Colonial Joseon accordingly to wartime conditions. Therefore, it began promoting conscription system, pressing for wartime money, encouraging the production of war supplies, and saving war supply consumption.

Since 1940s when the economy deteriorated even further,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considered that economy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outcome of war, and emphasized labor to increase productivity of the country.

Key words: Iksan(益山), Hyangyak(鄕約), hyanggyo(鄕校),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Japanese Colonial Era

▣ 이 논문은 2020년 10월 30일 투고되고, 2020년 12월 07일 심사 완료되어 2020년 12월 08일 게재 확정됨.

www.kci.go.kr

www.kci.go.kr